남 뒤만 보고 달리다 길 잃는 시대

태평로

김승범
주말뉴스부장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인기가 잦아들자 ‘봄동비빔밥’이 뜨는가 싶더니 ‘버터떡(찹쌀가루 등으로 만든 반죽에 버터를 넣고 구운 디저트)’이 치고 나왔다. 그렇게 유행이 옮겨가는 자리마다 한바탕 난리가 난다. 두쫀쿠를 없어서 못 팔 때는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의 국내 유통 가격이 두 달 새 5배 넘게 폭등했다. 봄동비빔밥이 인기를 모으자 봄동 가격이 30% 올랐고, 최근에는 대형마트에서 버터떡 재료인 찹쌀가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유행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SNS를 도배하는 음식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몰렸다가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집단적 쏠림의 반복에는 여러 이유가 겹쳐 있다. 한국인의 대세추종주의, 확산을 부추기는 SNS 알고리즘,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 등이 얽혀 작동한다.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소외되는 데 대한 두려움,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다. 최소한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강박 말이다.

여기에서 초점은 디저트 트렌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좇는 심리 자체다. 디저트 유행 좀 놓친다고 삶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조급함은 큰 기회 비용이 따르는 선택의 순간에까지 깊숙이 침투한다. 증시가 불붙자 너도나도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땐 줄줄이 ‘영끌’에 나서는 식이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첫 번째 이유로 “남들이 하니까 불안하기 때문”이 꼽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심리의 기저에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굳어지고 기회의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 열차에 올라타지 않으면 영영 낙오될 것’이라는 압박이 사람들을 같은 방향으로 몰아간다. 소수의 성공담만 남고, 다수의 실패는 빠르게 잊힌다. 그 결과 남들의 성공 방식은 ‘정답’처럼 굳어진다. 그 궤도에서 이탈하는 순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공포가 엄습한다.

> 두쫀쿠부터 빚투와 영끌까지
> ‘소외 공포’에 한방향으로 몰려
> 남들만 따라가다 나까지 잃어
> 나만의 속도·방향 지켜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거듭될수록 불안과 긴장이 누적된다는 점이다. 끊임없는 비교 속에 피로감이 쌓이고, ‘대열’에 끼지 못했을 때의 박탈감은 ‘나만 빼고 다 잘나간다’는 불만으로 이어진다. 그 끝은 대개 비슷하다. 성급한 판단과 무리한 실행이 뼈아픈 손실로 돌아오곤 한다. 유행만 믿고 창업했다가 재고와 빚만 남거나 충동적인 주식·부동산 투자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흔하다. ‘묻지 마 쏠림’ 이후 거품이 꺼질 때 치러야 할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복되는 실패와 불신의 구조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번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자신의 4분의 3을 잃는다”고 했다. 타인의 선택이 나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흐름에 휩쓸리는 객체가 된다. 뒤처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남들 등만 보고 달리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상태다. 방향을 완전히 잃는 순간 앞으로 나아가기도,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진다. 포모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자기 결정권부터 회복해야 한다.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지키며 끝까지 견뎌내는 힘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패의 위험을 나누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포용하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불안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경로를 선택할 용기를 낼 수 있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24]

보라색은 황제만 쓸 수 있었다

BTS의 귀환과 함께 서울 곳곳이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무지개의 끝에 위치한 보라는 BTS와 공식 팬덤인 아미(ARMY) 사이의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한다.

고대 문명에서 보라빛을 말하는 자색(紫色)은 오직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색이었다. 자연 세계에서는 무지개뿐 아니라 노을, 제비꽃, 자수정 등 도처에서 은은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보라색을 볼 수 있지만, 이를 물체에 고정할 안료로 만드는 일은 인류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였다.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는 뿔고둥의 분비물을 썼는데, 수만 마리를 잡아도 겨우 옷소매를 물들일 정도의 양이 나왔으니 값이 황금보다 귀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어서 더욱 욕망을 부추기는 보라는 그렇게 황제의 색이 됐다.

안정적인 보라색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최초로 성공한 건 고대 중국인들이었다. 그들은 바륨과 구리, 모래를 섞어 1000° C 이상의 고온에서 일정하게 구워내 오늘날 ‘한자색(漢紫色)’이라 불리는 안료를 만들었다. 엄청난 고난도 기술의 결정체였으니 이 또한 황제만이 쓸 수 있었다. 불멸을 꿈꾸던 진시황의 사후 세계를 지키기 위해 땅속에 도열한 수천 기의 병마용 중 전차병의 소매가 눈부신 보라색이다. 그저 흙빛인 줄 알았던 병마용은 사실은 모두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었으나 1970년대 첫 발굴 당시 공기에 노출되자 순식간에 모두 바스러져 버렸다. 1990년대 중반에야 독일과 중국 연구진이 찰나에 사라지는 색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고, 덕분에 한자색의 존재가 드러났다.

진시황의 병마용 중 전차병, 기원전 221~206년경, 높이 약 190㎝, 테라코타에 옻칠과 채색, 시안, 진시황릉 박물관 소장.

처음부터 보라는 ‘아미’의 색이었던 것. 그러나 오늘날의 보라는 억압적인 권력이 아니라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서로를 알아보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연대의 언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說

국민이 공정한 법의 보호 기대할 마지막 장치 하나는 있어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야 마땅한 부당한 권력이라고 한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표적 수사로 사람들을 괴롭힌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일만 크게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은 범죄 피해를 당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사례와 일반 범죄 수사의 건수를 따지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주말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일반 범죄 수사 기능까지 전부 없애 버렸다. 이대로면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고 범죄 피해자 국민은 법의 정의를 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형사소송법에 남은 검찰의 마지막 견제 장치인 보완 수사권까지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검찰이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보완 수사권은 검찰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공정한 수사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길이 사실상 없다. 가해자가 수사망을 피하고, 사건이 중간에 없어지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찰이 개입할 수 없다.

검찰의 보완 수사를 인정해야 잘못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독재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가 인권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의 관여와 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75만건에 달한다. 사기, 폭력, 성범죄, 명예훼손, 사이버 범죄 등 일반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이다. 검찰은 이 중 상당수 사건을 직접 수사를 통해 보완했고, 11만건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권을 행사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모자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역량이 된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선 두 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거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이기도 했다.

검찰 보완 수사권은 약자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공소시효와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사건, 살인·납치·마약 등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 체포와 피해자 보호 등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한 경우 검찰 직접 수사를 대체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확대해도 모자란 국민 보호 장치를 없애버리면 대부분 피해는 약자가 볼 수밖에 없다. 법조인들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全件送致)’ 제도도 재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몰래 덮어버리는 ‘암장 수사’의 피해자는 대부분 법률 약자인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 예외가 국민을 위한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듯하다가 결국 강경파의 주장에 따르는 행태를 반복했다. 검찰 보완 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모든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 무더기 경질에 정책발표 ‘0’, ‘입틀막’ 아닌가

대한상의가 상근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 3명을 해임·면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초 상속세 관련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인용된 영국 단체의 통계가 “가짜 뉴스”라고 질타한 뒤 일어난 일이다. 잘못된 보도자료를 낸 대한상의의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주요 경제 단체의 임원 10명 중 3명이 한꺼번에 옷을 벗을 정도의 일은 아니었다. 정부가 일을 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였으면 더 큰 오류가 있었어도 별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대한상의가 해당 보도자료에서 과중하다고 지적한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부 합산’ 과세 등에 대해 전향적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실효세율이 60%에 달해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다는 대한상의의 지적도 재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그런 정책 이슈를 다룬 보고서 내용에 틀린 것이 있다고 해서 임원을 대거 경질한다면 앞으로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산업통상부가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그 뒤 한경협은 주당 최대 10건까지 내던 보도자료가 2월 이후 1~3건으로 급감했고, 대한상의는 거의 4주 동안 0건을 기록했다. 이후 그나마 내는 자료도 정책 비판이나 제언 대신 사과문과 업무협약(MOU) 같은 내용뿐이다. 노란봉투법, 상법 3차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경제 단체들은 “입장이 없다”고 한다. ‘입틀막’(입 틀어막기) 아닌가.

경제 단체는 경제계 입장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일을 한다. 때로는 정부 입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도 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제언도 많다. 앞으로 상당 기간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폭주도 모자라 “상임위 100% 독식” 선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민주당이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17곳 중 민주당은 10곳, 국민의힘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17곳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에 입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지금도 마음대로 국정을 하고 있다. 보수·진보 모두가 우려했던 법 왜곡죄 등 사법 3법을 처리했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들도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처리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현행법까지 무시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처리했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 중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거의 없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일방적으로 폭주한 정당은 없었다. 그런데도 야당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국회 상임위까지 독식하려 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제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여야가 상임위를 배분하는 것이 관례였다.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는 2당 또는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맡게 하면서 타협을 추구해왔다. 이런 관행의 최대 수혜자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법안들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법사위원장에 예결위원장까지 맡으며 야당을 완벽한 들러리로 만들었다. 정청래,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야당일 때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더니 권력을 잡은 뒤에는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부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놀라운 것은 “집권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다.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훗날의 평가 어떨까?

문재인–이재명의 예산 폭증 vs 전두환의 1984년 예산 동결

뉴데일리
newdaily.co.kr

사상 최대 예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조기 추경?
야당일 땐 마구잡이 삭감 … 집권하면 흥청망청
선거 앞두곤 돈풀기 더욱 기승 … 국민은 바보?

102030 갚아야 할 나라 빚 왕창…

올해 예산 **727조 9천억**, 사상 처음 700조 돌파,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 8.1%, 증가폭 54조 7천억. 700조 슈퍼 예산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109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돌파, 51.6%로*** 높아진다. ***재정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예산을 마구 삭감*,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무차별 탄핵과 무차별 예산 삭감 폭거***는 ***선거 관리 의혹***과 함께 **《계엄 같지도 않았던 6시간짜리 계엄》**을 불러왔다.

그랬던 그들이 *재정 정책 기조를 대규모 확장으로 선회*했다. 집권 직후 작년 7월 ***소비 쿠폰 발행 31조 추경***을 했다. 그러더니 ***또 조기 추경***을 한단다. 유가 급등이 명분. 반도체 업황이 좋고 주식 거래세도 늘어 국채 발행 없이 한단다.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만큼, **세수가 늘면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이 재정 정책의 원칙. 하지만 현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다.

국민의힘은 ***《선심성 매표 추경》***이라고 강력히 비판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새해 본예산의 잉크가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나라 곳간을 열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 정책이다.”*

문재인에 이어 또, 또, 돈풀기 추경

이재명 정권의 조기 추경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나온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경》***을 *떠올리게* 한다. **문** 정권은 2020년 3월 11조 7천억 1차 추경을 했다. 이어 ***문재인***은 총선 2주일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직접 발표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미명의 12조 2천억 2차 추경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 아닌가. 이런 돈풀기는 나라 살림과 미래세대에 대해 생각이 없는 국민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쳤고,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총선 전 두 차례 추경 포함, **문** 정권의 ***네 차례 총 67조 추경은 나랏빚을 왕창 늘리고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켰다.

전두환의 예산 동결 결단

우–좌파 차이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 차이다. 좌파 정권들, 특히 문재인 이재명 정권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극히 희박하다. 역대 우파 정권들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했다. 인기 없는 정책을 택해 손해를 보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전두환** 정부의 **1984년 예산 동결**. **전**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1984년 예산을 1년 전 수준 동결이란 초강수를 택했다. 2차 오일쇼크 등으로 물가가 치솟고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던 상황에서 김재익 경제수석이 설득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것****이며,*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통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 정권도 예산 폭주 열차에 올라탔다. 나랏빚이 폭증하게 생겼다. 세수가 늘면 그것으로 나랏빚을 줄여야 하는 데, 그냥 펑펑 쓰겠다고 한다. 그 빚은 누가 갚나? 405060708090이? 102030이 갚아야 한다. 그들 허리만 새우등 되게 생겼다. ⓒ 제미나이

전 정권은 **《제로 베이스 예산》** 원칙을 도입,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추곡 수매가 인상도 최소화해 통화량이 늘지 않도록 했다.

집권 여당 민정당은 긴축재정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은 관철시켰다. 초유의 극약 처방에 힘입어 20-30%를 웃돌던 물가 상승률은 뚝 떨어져 **《한 자릿수 물가 시대》**를 열었다. 낮아진 물가와 재정건전성은 이후 **《3저 호황(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시절의 **폭발적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전 정권 시절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병 생활을 했던 이들은 대부분 60세를 넘었다. 상당수는 **전두환** 정권에 극히 비판적이었다. 60~70대 인사들 중에는 경제-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전두환** 정부의 공과에 대해 균형 잡힌 재평가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와 관련, 반드시 빠지지 않는 사례가 바로 **1984년의 예산 동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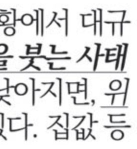
건국 후 최빈국 수준 한국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급성장했다. 냉정히 따져 보자. **이승만**이 구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위에 **박정희** 시대 들어 한국형 산업혁명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전두환** 시대는 이를 이어받아 한국 경제를 또 한 단계 끌어올렸다.

무엇 위한 조기 추경?

조기 추경은 걱정스럽다.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규모 돈 풀기 추경을 할 경우,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통화량이 늘고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 *위험 수위에 들어간*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집값 등 *자산 가격 불안 위험성*도 적지 않다.

사상 최대 본예산 직후의 조기 추경이 재정건전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권력에 잘 보이려는 어용 지식인들 중엔 조기 추경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을 것. 하지만 경제 원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 중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3월 16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98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